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1호 (2023.09.08)

■ 이슈

(국제) 최근 중국경제 상황 및
인천시 영향 점검

■ 주요 산업 현황

(건설) 건설 및 주택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1호 (2023.09.08)

Cotents

I. 이 슈

(국제) 최근 중국경제 상황 및 인천시 영향 점검 1

II. 주요 산업 현황

(건설) 건설 및 주택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교육) 교육부, 학생 인권·교권 균형 잡힌 현장을 위한 교권 회복 방안 마련 11

(보건) 코로나19, 9월부터 4급 감염병으로 하향 11

(산업)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신속 개선 12

(경제) 정부, 올해 대비 2.8% 증가한 2024년 예산안 발표 12

(보건)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13

(주거) 청년 주거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마이홈 앱' 청년전용 페이지 신설 13

(복지) 국세 관련 안내문,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으로 확인 가능 14

(경기)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김효영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국제 > **최근 중국경제 상황 및 인천시 영향 점검** +

#중국경제 #경제위기론 #경제 파급경로 #대응

-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이며, 비구이위안, 위안양 등 대형 부동산 기업의 채무불이행 문제가 현실화하는 등 중국발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확산
 -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1년 6월 중국 정부가 '3대 레드라인(三條紅線)' 위반 정도에 따라 부동산 기업의 대출총액을 제한¹⁾한 이후,恒大그룹 부도, 다렌완다그룹 및 비구이위안 채무 위기 등으로 인해 위기감 고조
 - '3대 레드라인' 규제란 ①선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비율 70% 미만 유지 ②순부채비율 100% 미만 유지 ③단기부채 대비 현금 비율 100% 미만 유지 등 중국 당국이 부동산 부문 부채 급증에 따른 리스크 예방을 위해 부동산 기업에 요구한 재무건전성 지표 규제 정책
 -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는 202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하반기 전망에 비해 상향 조정한 5% 초~중반으로 예상²⁾했으나, 코로나 리오프닝 이후의 중국경제가 시장의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코로나 리오프닝 이후 중국경제는 내수 부진, 산업생산성 감소, 높은 청년실업률 등의 문제로 인해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어, 중국 당국에서는 △1조 위안 규모의 특별채권 발행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충 △금리인하 △소비 활성화 대책³⁾ 등 경기부양책을 시행 중
 -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경색 △지정학적 충돌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긴축통화정책 △중국경제 위기의 제3국 확산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증폭될 경우, 글로벌 및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생산시장임과 동시에 소비시장이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부진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등 제3국의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권을 통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⁴⁾

[표 1] 기관별 중국 경제전망 (단위 : %, %p)

구분	2023 전망 ('22.하반기)	2023 수정전망 ('23.5월~7월)	직전 전망 대비 증감	2024 전망 (최신 기준)
OECD	4.6(2022.11)	5.4(2023.06)	0.8	5.1(2023.06)
IMF	4.4(2022.10)	5.2(2023.07)	0.8	4.5(2023.07)
ADB	4.5(2022.09)	5.0(2023.07)	0.5	4.5(2023.07)
WB	5.2(2022.06)	5.6(2023.06)	0.4	4.6(2023.06)
중국은행연구소	5.3(2022.11)	5.4(2023.07)	0.1	-
한국은행	4.5(2022.11)	5.3(2023.05)	0.8	4.6(2023.05)

* 자료 : 기관별 경제전망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괄호 안은 자료 발표 일자를 의미하며, '22.하반기 중국은행연구소의 발표 전망치는 기준 시나리오의 전망치를 기준

1) 3대 레드라인 조건 달성시 연간 부채를 전년대비 15%까지 확대할 수 있으나, 하나라도 미충족 시 5~10% 수준까지만 확대 가능.
 2) IMF, WB, OECD, ADB 등 주요 경제기관은 2023년 수정경제전망에서 중국경제가 2022년 12월 '제로 코로나19' 철폐 이후 케이터링, 숙박,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
 3) 유급휴가제, 탄력근무제, 관광지 입장료 감면, 식당·문화시설 영업시간 연장, 해외 단체여행 허용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포괄.
 4) IMF에 따르면 2028년까지 중국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는 22.6%에 달하며, 인도(12.9%), 미국(11.3%) 순.

-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에 따르면 2023년 중국경제는 리오프닝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경제의 기반이 되는 △내수 △부동산 △수출 등의 경기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으로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 존재
 - (산업) 산업생산 증가율 및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의 둔화,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의 감소 등 전반적인 경기지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
 - 2023년 7월 중국기업의 총부가가치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7%, 전월대비 0.01%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누적 고정자산투자성장률 역시 둔화하는 추세
 - 2023년 7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생산자물가지수는 95.6으로 2022년 10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역시 2023년 7월 99.7을 기록하며 감소세로 전환
 - (내수)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른 2023년 7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봉쇄조치 해제 이전인 지난해 동월의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중국경제의 민간소비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
 - 민간소비 성장 둔화의 이면에는 △청년실업률 증가(청년실업률 20% 이상) △인구감소(2023년 1월 기준 전년대비 85만명 감소) △디레버리징 선호 심리 △부동산 시장 불안 등 경제활력을 저하하는 요인이 산재
 - 중국의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지난해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2023년 6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약 21.3% 수준으로 급격하게 높아지는 등 취업난 및 고용불안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수출입) 2023년 상반기 기준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했으며, 수입액 역시 6.6% 감소
 - 2023년 6월 기준 중국의 수출액은 2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감소, 수입액 역시 4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감소하고 있어 둔화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부동산) 중국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중국의 건설·부동산 시장은 1-7월 누적 신규 분양주택 면적이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개발투자 역시 같은기간 8.5% 감소하는 등 시장 부진이 지속
 - (부채) 중국의 2023년 1분기 기준 GDP대비 국가 총부채비율은 281.8%로 2021년 말 이후 5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63.3%, 기업부채 167.0%, 정부부처 51.5%로 삼대 경제주체의 부채비율이 모두 역대 최고 수준⁵⁾
 - 정부부처 부채와 별도로 산출되는 중국 지방정부 특유의 '지방정부 융자기구(LGFV)'의 채무가 증가하는 것 역시 잠재적 위험요인

[표 2] 중국 고정자산투자 및 소매판매 월별 누적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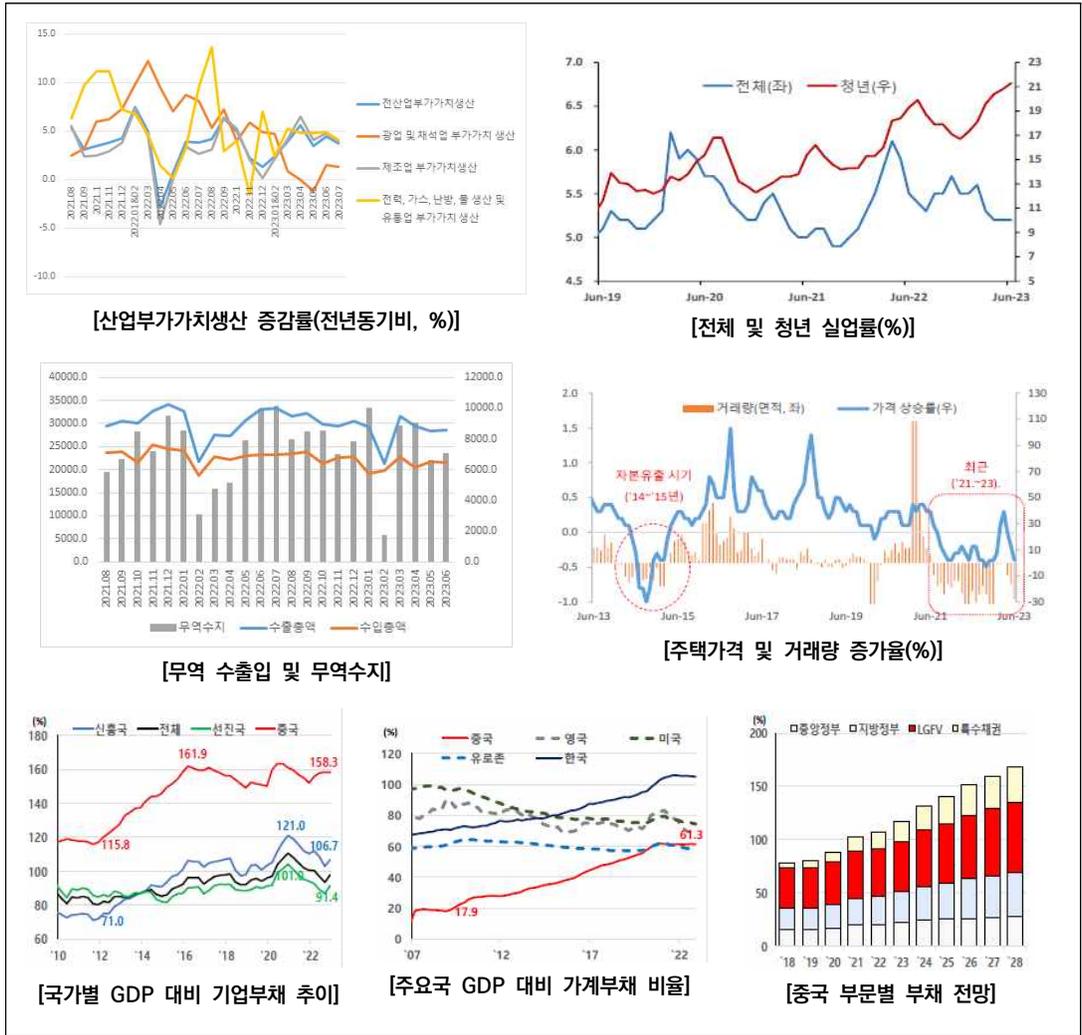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고정자산투자	5.5	5.1	4.7	4.0	3.8	2.4
민간고정자산투자	0.8	0.6	0.4	-0.1	-0.2	-0.5
소매판매	3.5	5.8	8.5	9.3	8.2	7.3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참고 및 재구성

* 주 : 누적기간 동안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이용

5) 동 수치는 모두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NFID)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비율은 GDP 대비 비중을 의미함. 한편 IMF에서는 금융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GDP 대비 가계부채의 위험수준을 65%로 설정하고 있음.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국제금융센터(2023.08), 현대경제연구원(2023.08) 참고 및 재구성
 * 주 : '무역 수출입 및 무역수지'의 좌측은 수출입액, 우측은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중국 주요 경제지표 추이

- 상기와 같은 경제상황 악화 외에도 △정부 신뢰도 악화 △미-중 갈등 장기화 등 대내·외적 요인이 중국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
 - 최근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우선한 민영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더불어 경제 통제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경향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기업의 신뢰도가 약화
 - 또한 2022년 말 제로 코로나 정책과 그에 따른 노인 복지 축소 등으로 인해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분배정책 실패 △높은 청년실업률 △과도한 수준의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등 누적된 사회불만이 인터넷 발달로 인한 표출 경로 확대에 힘입어 정치적 불안이 증대
 -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의 공급망 견제로 인한 탈중국화(디커플링, 디리스팅 전략) 역시 중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부진 지속 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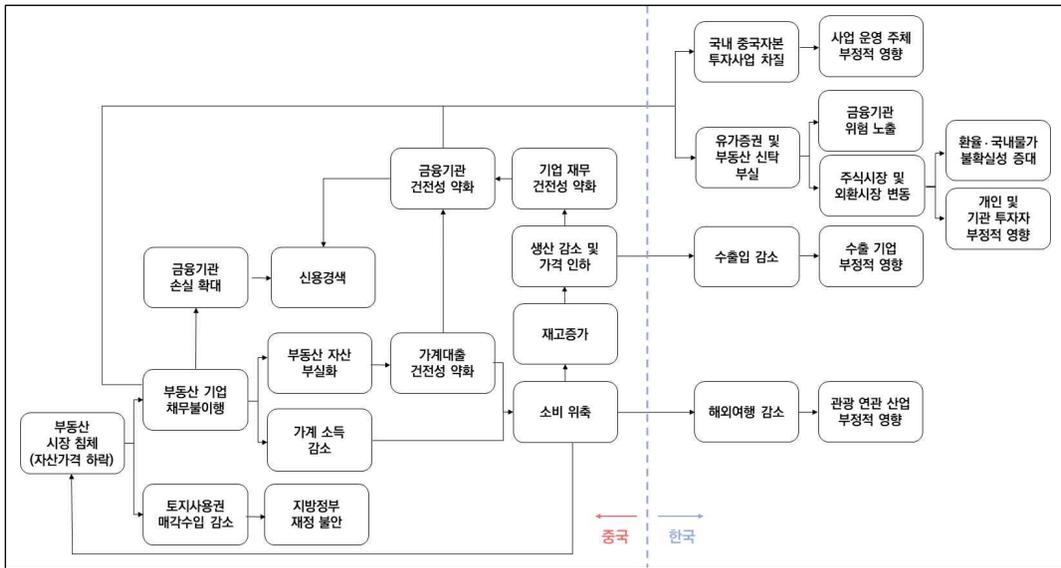
-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업생산성 및 기술력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압력을 받는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 최근 발생한 중국의 부동산 기업 채무불이행이 직접적으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⁶⁾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거나, 장기적으로는 △수출 △금융·투자 △물가 및 내수 △외환 등의 경로를 통해 국내 및 인천의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 (수출) 부동산 경기 침체,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⁸⁾, 채무 상환 부담 가중 등 중국 가계의 악재로 인해 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및 면세점, 화장품 등의 소비재 상품 중심으로 수출액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존재
 - (금융·투자) 최근 중국 내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불이행은 금융기관 부실, 외국인 투자 심리 저하, 소비시장 위축 등 중국의 실물경제에는 직접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
- 중국에 신탁상품 관련 파생상품이 적다는 점과 신탁회사와 은행권의 낮은 연계성을 고려했을 때, 중릉신탁 등 부동산 신탁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국내 금융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중국 부동산개발회사 현금 유동성 문제시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 등과 같이 중국 자본이 유입된 국내 투자 사업 및 중국 진출 기업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산업 구분 및 기업의 업종에 따라 체감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
 - 한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정부의 토지사용권 세입 감소 이슈가 있어 지방정부 담보물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 필요
- (물가·내수) 중국의 경기 침체 지속 시 환율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국내 물가 상승 압력과 더불어, 중국인 단체 관광 규모 축소 및 유커 소비심리 약화로 인한 관광 연관산업에의 부정적 영향 가능성 존재
 - (외환) 위안화와 아시아 역내 통화의 높은 동조성으로 인해 중국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자본 유출 발생 시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 존재
- 인천시의 경우 지역 내 기업의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래객의 대다수가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어 중국경제 상황에 따라 수출 및 관광 연관산업에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 존재
- 2023년 1-7월 누적 수출액 기준, 인천시 수출 상위 10대 국가는 ①중국 ②미국 ③베트남 ④대만 ⑤일본 ⑥싱가포르 ⑦인도 ⑧홍콩 ⑨튀르키예 ⑩멕시코 순
 - 인천시의 주요 수출 상대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으로, 2023년 1-7월 수출 누계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개 국가에 대한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약 52.6%를 차지

6)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짧은 기간 안에 순조롭게 압축성장을 이룬 이후 장기간에 걸쳐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최근의 중국경제가 이미 정점에 도달한 이후 중진국 함정에 진입한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

7) 동 평가는 기획재정부(2023.07), 국제금융센터(2023.08),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23.08), 현대경제연구원(2023.08),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2023.08) 등을 참조.

8) 인천연구원(2021)에 따르면 중국의 가구 자산 증가 기여 중 부동산이 6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최근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액 비중의 차이는 좁혀지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2023년 對중국 누적 수출액이 전체의 약 2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수출 1위 대상국
- 한편, 인천시 對중국 수출의 경우 △반도체(MTI831) △무선통신기기(MTI812) △석유화학 중간원료(MTI212) △비뉴-치약 및 화장품(MTI227) 등 상위 4개 항목이 전체 수출의 70%가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항목의 변화에 따라 전체 수출입 경기가 크게 영향
- 2023년 6월 기준, 방한 중국인은 전체 외래객의 약 17.5%, 이중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의 비중은 약 66.6% 수준으로, 특히 항공을 통한 입국객 수가 빠르게 회복 중
- 2023년 6월 기준 인천 입국 전체 외래객 대비 중국인 비중은 약 15.9%로, 2023년 들어 중국인의 방한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인천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도 증가하는 추세



[그림 2] 중국경제 위기의 국내 파급경로



*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국가통계포털(KOSIS) 참고 및 재구성
 * 주 : 월별 수출입액 자료를 활용하여 그래프의 왼쪽은 수출입액 기준, 오른쪽은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작성

[그림 3] 인천시 對중국 수출 및 중국인 입국 현황

- 인천시 경제와 중국경제의 깊은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부동산 불안, 금융리스크, 부채리스크 등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인천 기업의 수출국 다변화 및 기술력 제고, 중국인 관광소비 대체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
 - 중국경제 위기 현실화에 따른 영향은 인천을 포함한 국내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국경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향성을 수립 후 그에 발맞춰 움직이는 것이 중요
 - 인천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지자체와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 축소 △수출국 다변화 △중국 진출 전략 조정 등 중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인천시 수출액에서 꾸준히 3위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과 더불어, 아직까지 수출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싱가포르, 인도, 멕시코,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국가로의 수출 다변화가 요구
 - 또한 글로벌 기술경쟁 시대에 중국의 위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중국기업 대체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 특히 소재·부품·장비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기술력 제고를 통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해야할 필요성이 증대
 - 인천은 중국의 단체관광 허용에 따른 유커의 체류 및 경유에 따른 관광, 면세, 항공 및 운송 등의 파생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므로, 중국의 소비심리 위축 장기화로 인해 중국 관광객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수요국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

건설 > 건설 및 주택시장 동향


#건설수주 #건축허가 #건축착공 #건설기성 #주택허가 #미분양

- **(전국건설)** 2023년 7월 국내 건설시장은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 및 건설수주액, 동행·후행지표인 건축착공 면적 및 건설기성액이 모두 전월대비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
 - **(수주·허가)** 전국 건설수주액 및 건축인허가 면적은 2023년 3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하며, 2022년 2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건설시장 경기가 부정적
 - 7월 건설수주액은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각각 55.3%, 53.3% 감소한 824.5백억 원 수준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수주액이 각각 16.1%, 60.2% 급감
 - 건축인허가 면적 역시 전년동월대비 45.7%, 전월대비 28.0% 감소한 8,483천m² 수준으로, 2022년 5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
 - **(착공·기성)** 건축착공 면적이 202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건설기성액은 2022년 1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는 추세
 -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동월대비 48.9%, 전월대비 25.4% 감소한 4,666천m² 수준으로, 2022년 10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감소 현상이 지속
 - 7월 건설기성액은 전년동월대비 12.8% 증가, 전월대비 16.4% 감소한 1,375.7백억 원 수준으로, 기성액에 선행하는 지표인 건설 수주·인허가·착공 등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전년동월비 증가세 역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인천건설)** 2023년 7월 기준 인천지역은 건설수주액 및 건축허가·착공 면적이 모두 전월대비 감소
 - **(수주·허가)** 인천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축허가 면적은 등락을 반복하며 증가하고 있어 전국 추세와 차이
 - 인천 건설수주는 지난 5월 207.8백억 원을 기록하며 2023년 상반기 중 최고액을 달성했으나, 2023년 7월 수주액은 전월대비 90.7%, 전년동월대비 82.3% 감소한 12.5백억 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
 - 2023년 7월 기준 인천의 건축허가 면적은 전국 추이와 다르게 전월대비 29.3% 감소, 전년동월대비 23.3% 증가한 636천m² 수준
 - **(착공)** 인천의 건축착공 면적은 전월대비 76.9%, 전년동월대비 39.7% 급격히 감소한 140천m² 수준으로, 2023년 2분기 증가세를 보이던 착공면적이 감소로 전환

[표 1] 건설산업 수주액 및 기성액 추이

(단위 : 백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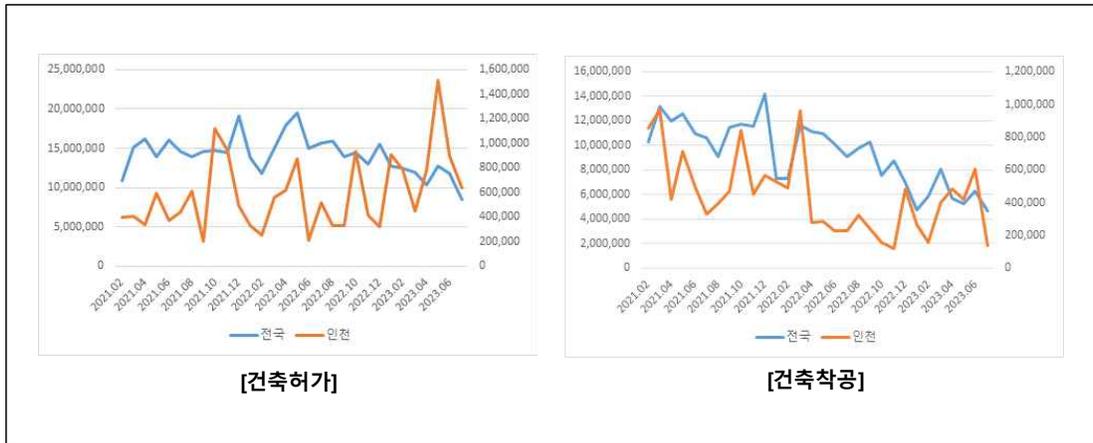
지역	구분	'22.12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전국	수주액 (증감률)	2,345.6 (-12.5)	1,932.9 (19.1)	1,135.5 (-3.5)	1,139.0 (-41.0)	962.6 (-46.9)	1,546.0 (-18.8)	1,765.6 (-29.9)	824.5 (-55.3)
	기성액 (증감률)	1,784.6 (6.6)	1,220.3 (9.4)	1,271.3 (26.0)	1,515.5 (17.4)	1,456.8 (16.2)	1,442.5 (8.2)	1,646.5 (11.2)	1,375.7 (12.8)
인천	수주액 (증감률)	124.7 (-55.5)	29.4 (-83.2)	52.0 (-11.1)	29.3 (-68.2)	47.0 (-24.8)	207.8 (79.0)	133.7 (12.2)	12.5 (-82.3)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건설경기동향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 1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표기

2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3 : 건설수주액 및 기성액은 최근 연도에 진행된 '건설업조사'에 근거하여 각각 총기성액의 54%, 50%에 해당하는 기성액 순위 상위업체 선정하여 작성된 정보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건축허가 및 착공은 연면적(m²)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축은 전국 기준, 우축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건축 인허가 및 착공 현황(2023.07)

- **(전국주택)** 2023년 7월 기준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분양물량 감소 및 주택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미분양 주택 수 역시 감소하는 추세
 - **(허가)** 국내 2023년 7월 주택건설 인허가는 전월대비 43.0%, 전년동월대비 50.0% 감소한 18,065호 수준으로, 전국의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5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세⁹⁾
 - 공공부문은 지난해 7월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적었던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94.8% 증가했으나, 인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문 물량이 같은 기간 53.1% 감소하여 전체 인허가 물량이 감소
 - **(미분양)**¹⁰⁾ 전국 미분양주택 수는 전월대비 5.0% 감소, 전년동월대비 101.7% 증가한 63,087호로, 2023년

9) 주택의 경우 공급(입주)까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이후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주택공급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

10) 통계청 및 주택협회에서 제공하는 미분양자료는 공공부문의 미분양물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민간부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월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

- 미분양주택의 감소에는 2023년 1-7월 누적 공동주택분양이 전년동기대비 44.4%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전월대비 3.8% 감소한 9,041호로 수준으로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 **(인천주택)** 인천지역 주택 인허가 수는 지난 4-6월 연속 증가한 이후 7월 들어 크게 감소하였으며, 미분양 주택수는 2023년 3월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

- **(허가)** 인천의 2023년 7월 주택건설 인허가는 전월대비 76.8%, 전년동월대비 46.1% 감소한 987호 수준으로, 민간부문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월대비 -68.0% 급락한 것에 비해 공공부문 물량은 소폭 증가
- **(미분양)** 2023년 7월 기준 인천의 미분양주택 수는 전월대비 43.7% 감소한 1,212호 수준으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여파로 제주도를 포함한 17개 시도 중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이 감소

[표 3]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및 미분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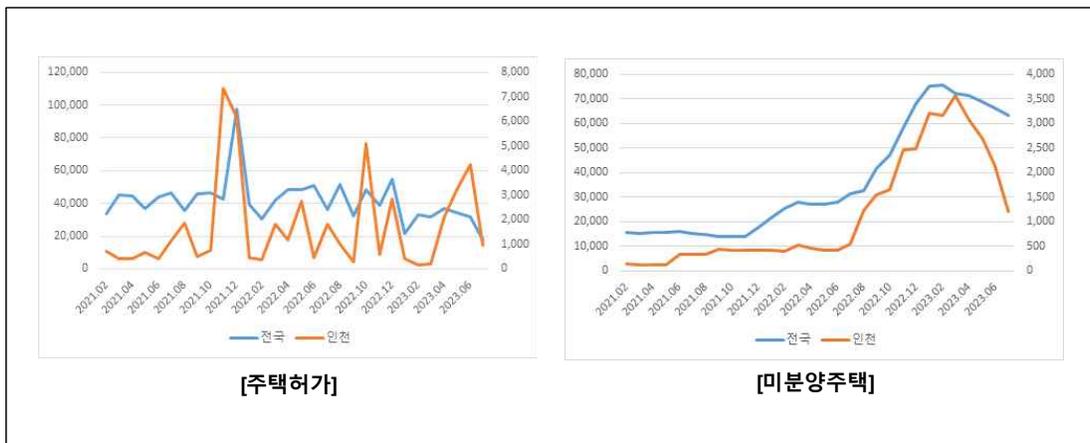
(단위 : 호, %)

항목		'23.04	'23.05	'23.06 (p)	'23.07 (p)	'22.07	전월비	전년 동월비
허가	공공	1,482	-6	3,432	1,500	770	-56.3	94.8
	민간	35,445	34,169	28,247	16,565	35,326	-41.4	-53.1
미분양	민간	71,365	68,865	66,388	63,087	31,284	-5.0	101.7
	(준공후)	8,716	8,892	9,399	9,041	7,330	-3.8	22.4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건설실적통계', '미분양주택 현황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주택허가 및 미분양은 호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2 : 주택허가 통계는 월별 누계액 자료에서 전월 자료를 제한 각 달의 수치를 산출하여 이용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건설실적통계', '미분양주택 현황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 : 주택허가 및 미분양은 호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2] 주택 건설인허가 및 미분양 현황(2023.07)

공공부문의 자료가 더해지면 더욱 증가할 가능성.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3.07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107.7	-16.1	85.1	-2.9	191.0	24.4	131.3	-8.5	130.1	-10.7	143.5	3.8
자동차	126.6	6.2	123.8	1.7	116.9	26.8	123.7	3.4	127.5	11.4	122.5	24.5
기계장비	96.4	-14.5	97.6	-12.7	148.1	10.9	131.8	-20.7	132.1	-19.4	196.2	75.0
바이오-의약	130.4	6.1	117.3	-3.4	-	-	185.0	48.6	84.8	6.5	-	-
바이오-화장품	86.9	-7.5	90.6	-3.2	103.9	-9.3	104.4	-6.1	102.0	-5.8	106.1	3.8
건설 수주액 (억원)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21,573	-16.1	60,554	-60.2	495	-86.5	755	-77.6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상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 동월 대비 비율로 표기

3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교육

교육부, 학생 인권·교권 균형 잡힌 현장을 위한 교권 회복 방안 마련



#교육부

- 교육부가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원 △민원 대응의 시스템화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
 - 금번 종합방안은 크게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교육 현장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위해서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를 제정하고, 시·도별 학생인권조례의 권리-책임 균형 개정을 지원
 -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학교 단위의 대응 역량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개선·강화할 계획
 - 또한 교권 침해 행동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와 함께 학교생활 규약 안내를 통한 교원-학부모의 상호이해 증진을 추진하고, 학부모 등의 민원을 기관 단위의 민원대응팀이 대응하도록 체계화할 예정

보건

코로나19, 9월부터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질병관리청

- 방역당국이 8월 31을 기점으로 코로나19의 단계를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진료 △상담·안내 △전담 병상 △검사·치료비 지원 등이 종료 또는 한시 유지되며,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보호 △감시·통계와 관련한 일부 수칙의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

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 후
마스크	• 일부 유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유지(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
선제검사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입원 환자, 보호자(간병인)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필요시 검사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 유지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 필요시 검사
감염취약 시설 보호	• 접촉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 허용 •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방역수칙 준수)	• 접촉력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 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 • 대면 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감시·통계	• 전수감시 • 주간 단위 통계 발표	• 표본감시(양성자·하수감시 등 다중 감시체계) • 주간 단위 감시기관 내 발생 동향 및 변이 바이러 스 유행 항상 발표

#국무조정실

-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입지 △화학물질 관리 △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순환경제 △외국인 인력활용 △산업안전 관련 6개 킬러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

수행주체	과제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산단 입주 가능 여부 판단 • 산단 내 생활·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10년 이상 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확대
	화학물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규제의 위험비례·정부책임형 규제 전환 • EU 수준 비례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및 등록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화평·화관법 개정안 발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평가협의 면제 및 지자체 개발사업 평가권한 지방 이양 • 민간투자 사업의 전략평가 및 긴급재난대응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
	탄소중립·순환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스플레이 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국제기준 수준 완화 • 첨단산업 불소 배출기준의 합리적 개선 • 첨단산단 용수공급방안 선제 마련
법무부 고용노동부	외국인 인력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기능인력 전환 및 외국인 고용허가 확대 등 외국인력의 도입 확대 • 규모·업종별 외국인근로자 활용제한 규제 완화 및 유학생 활용 허용
	산업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되거나 낡은 산업안전 보건규칙 680여 개 전면 개편 • 핵심산업 현장으로 산업안전 규제 80여 개 철폐

#기획재정부

-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초를 가져가되, 약자보호, 국민 안전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하여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편성
 - 정부는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할 방침
 - 중점적으로 정비된 분야는 연구개발(R&D)과 국고 보조금 예산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R&D예산은 올해보다 16.6%,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보조사업 예산은 3.5% 감소
 - 기존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①약자 복지 ②미래 준비 ③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정책분야에 중점적으로 재투자하여, △생계급여 지원금 △소상공인 대환대출 △첨단산업 투자 △육아휴직급여 기간 연장 △병사월급 인상 등 민생을 위한 정책에 활용할 예정

#보건복지부

- 지난 6월 1일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운영하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9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
 - 6월부터 3개월간 운영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에는 시범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용 지침, 대국민 안내자료,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배포하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자체, 의·약단체, 앱 업계 등에 시범사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요청
 - 계도기간 중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향후 △비대면 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처방 △처방제한 일수 초과 등 지침 위반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
 -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급여 청구액 삭감과 더불어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하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
 -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불법 비대면 진료 근절을 위한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참여 과정 중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하면 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 가능
 -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경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계획
 - 우선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 보완을 검토할 예정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193개에 달하던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신설
 - 국토부는 정부 및 지자체의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기타지원 등 4개 유형의 10가지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하고,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
 - 단순화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 후 지역사업의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며,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정리
 - 또한 마이홈 앱의 청년 전용 페이지에는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한 주거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기진단 기능을 도입하고, 진단 결과 화면에서 신청페이지로 바로 연결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정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국세청

- 8월 31일부터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세의 신고·신청·환급과 관련한 안내문을 확인 가능
 -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이동통신 3사(KT·LGU+·SKT)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모바일 안내문 발송을 시작해 2022년까지 총 7,600만건의 모바일 안내문 발송을 통해 우편발송 예산을 절감
 - 8월 31일부터는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협약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 발송을 확대 시행하며, 모바일 안내문을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스미싱 등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광고·스팸 안내문으로 혼동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 앱을 통한 모바일 안내문은 국세청의 로고와 전자문서 문구가 포함된 알림을 누르거나, 각 앱에 개설된 국세청 전용 전자문서함을 통해 스팸·스미싱 걱정 없이 안심하고 확인 가능
 - 네이버는 안내문서 도착 시 모바일 및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알림을 발송하며, 전자문서를 기한 내 확인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2번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KB국민은행(KB스타뱅킹)과 신한카드(신한pLay)는 전자문서 도착 시 알림을 제공하며, 앱에서 발송하는 알림은 금융기관 보안시스템을 바탕으로 앱에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신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추석을 맞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지원을 시행할 계획
 - 우선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황금녘 동행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상점가 이벤트 등 총 90여 개의 지역 행사도 9월 한달간 전국에서 지속
 - 황금녘 동행축제 기간동안 온라인몰·백화점·전통시장 등에서 2만 4,000여 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할 예정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를 1인당 30만 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10~12월의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여 공공부문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등을 추진
 - 또한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산하 정책기관을 통해 9~10월 두달 간 대출·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총 7조 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

참고 자료

-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2.11 & 2023.06.
- IMF,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10 & 2023.07.
- WORLD BANK GROUP, 「Global Economic Prospects」, 2022.06 & 2023.06.
-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22.09 & 2023.07.
- 中国银行研究院(Bank of China 중국은행연구소), “全球经济金融展望报告”, 2022.11.30.
- 中国银行研究院(Bank of China 중국은행연구소), “中国经济金融展望报告”, 2023.07.03.
- 한국은행,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2.11 & 2023.05.
- 국제금융센터, 「중국경제 위기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2023.08.03.
- 현대경제연구원, 「중국 금융시장에 드리워진 7가지 그림자」, 2023.08.16.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중국 경기부진의 복합적 성격」, 2023.07.16.
- KDI, 「나라경제 - 부동산 침체, 민간소비 부진, 인구구조 변화 등 리스크 안고 있는 중국경제」, 2023.06.
- KOTRA 상해주재원, “최근 인민은행의 금융기관 리스크 평가 결과”, 2023.05.26.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2023년 하반기 중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2023.08.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상해주재원·홍콩주재원,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2023.08.18.
- 중국국가통계국, www.data.stats.gov.cn/english.
- 인천연구원, 「한중Zine 최신중국동향」, Vol.296, 2021.03.15.
- 국제금융센터, 「최근 위안화 약세 배경 및 시사점」, 2023.05.09.
-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2023.08.20.
-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중국발 디플레이션 우려 점검」, 2023.08.18.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관광통계」,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및 「주택건설실적통계」.
- 한국주택협회,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사 대신 학교장이 ‘민원’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2학기부터 시범운영”, 20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31일에 4급 감염병으로 하향…‘선별진료소는 유지’”, 20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킬러규제 허파’로 투자 물꼬 튼다…기업활력 제고 위해 신속 개선”, 2023.08.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예산 2.8% 증가한 657조 원…허리띠 졸라매고 약자 위한 예산 늘렸다”, 2023.08.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계도기간 종료”, 2023.08.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 주거정책 정보 한 곳에…‘마이홈 앱’ 청년 전용페이지 신설”, 2023.08.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에서도 국세 안내문 확인 가능”, 2023.08.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추석 맞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7조 2000억원 유동성 공급”, 2023.08.31.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1호(2023.09.08)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일 2023년 09월 08일
주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